

## 한국정치담론의 영웅신화적 세계관과 그 시대착오적 촛스러움

정성원\*

### I. 한국정치의 외양과 내면

한국의 정치는 밖에서 보기에 충분히 성숙해 보인다. 제도적인 수준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강력한 시민사회가 존재하며,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정당들이 어느 정도는 좌우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 권위주의 정권들의 오랜 억압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성공적으로 표출되었고, 시민사회는 성장했으며, 위로부터의 동원에 근거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정당들은 점차 밑으로부터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정당들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 21세기의 한국은 더 이상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억압을 특징으로 하는 신생 저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미국의 학부에서 사용되는 많은 비교정치 교과서들은 각종 지표를 이용하여 한국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선진 민주국가(advanced democracy)로 분류하기도 한다.<sup>1)</sup> 다른 선진 민주국가들에 비해 아직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한국은 이런 선진적인 이미지를 세계에서 점차 획득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확산되는 한류열풍 덕분에 누군가에게 한국은 여러 측면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쿨(cool)한 대상이기도 하다.

---

\* 뉴욕시립대

1) 예를 들어 미국 학부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비교정치 교과서 중 하나로서 필자가 학부 비교정치 강의 교과서로 사용했던 Patrick H. O'Neil, *Essentials of Comparative Politics*, 2nd ed. (New York: W.W. Norton, 2007), 7장을 보라.

그러나 밖에서 보이는 쿨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바라보이는 한국정치는 한국의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생산해 내는 그 시대착오적인 정치담론들과 행동들로 인해 촌스럽기 그지없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이나 행동을 항상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하고자 하고, 그 선택과 행동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줄 정치담론을 구성한다. 이는 모든 나라에서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또는 해야만 하는 일이기며, 이 자체에 대해서는 무어라 특별히 말할 것이 없다. 문제는 한국의 주요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담론에 국가, 국민, 민족, 민주주의, 역사 등등의 상당히 추상적인 용어들을, 그 개념들에 대한 뚜렷한 이해나 설명도 없이 절대적인 규범성만 부여한 채, 마구잡이식으로 동원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으로써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과 행동을 규범적으로 정당화한다. 즉 자신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거나 선한 것이고 이에 대한 반대는 절대적으로 틀리거나 심지어 악한 것이라는 식으로 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담론은 지금의 정치적 현실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그렇기에 한국정치가 마치 지상에서 멀리 떨어진 초현실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신과 악마를 대리한 영웅과 반영웅 간의 대결인양 이를 거의 신화적인 장엄함으로 채색한다. 이 속에서 현실의 정치인들은 보통의 평범한 인간일 수 없다. 과거의 몇몇 정치적 인물들은, 그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무엇이든, 신과 같은 승배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악마와 같은 증오의 대상으로 구현된다. 그리고 살아 있는 현시대의 정치인들은 절대악에 맞서 절대선을 구현하고자 투쟁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이 된다. 결국 한국정치는 현실이 아닌, 장엄한 영웅들의 투쟁담으로 가득한 엄숙한 신화의 세계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투쟁담은 때때로 국회에서 물리적인 충돌로 시현되기도 한다.

현재의 한국정치에 만연한 장엄한 영웅신화적 세계관에 근거한 정치담론은, 우리가 아직도 과거 한국의 역사에 존재했던 결정적 시기(critical juncture) 내지 전환기(turning point)를 살고 있는 듯 느끼게 해준다. 물론 현재가 전혀 무의미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정치적 선택이 경로의존성(path-dependence)을 따라 미래에 커다란 정치적 차이를 만들어 낼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작금의 시기를 영웅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을 해방, 건국, 한국전쟁, 민주화 투쟁기 등과 병치시키기에는 한국사회에서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상당한 정치발전이 진행되었다. 그렇기에 21세기의 한국정치 현실을 신화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비합리적, 비이성적일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이기도 하다. 만약 쿨함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촌스러움이라는 단어를 시대에 뒤떨어진, 시대착오적인 모양새나 행동양식에 적용할 수 있다면, 안에서 바라보이는 지금의 한국정치는 그 쿨해 보이는 외양과 달리 무척이나 촌스럽다.

## II. 현 한국정치담론의 규범적 성격과 시대착오성

영웅신화적 세계관의 시대착오성이 지금의 한국정치에서 담론을 통해 어떻게 생산되고 또 재생산되는지를 한미 FTA, 4대강 개발, 서울시 학교 무상급식이라는 3가지 최근 정치이슈를 중심으로 생성된 담론을 놓고 살펴보자. 먼저 본격적인 검토 전에 지적되어야 할 것은 이들 이슈가, 찬성과와 반대파 사이를 가르는 그 강고한 정치적 균열선(political cleavage)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국정세를 결정적인 순간 내지 전환점으로 정의 내리게 할 정도의 중차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미 FTA가 초래할 장기적인 이득과 비용이 분명히 균등하지는 않은 방식으로 배분되고 분담되겠지만,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한국이 지불해야 할 장기적 비용이 기대되는 단기적 이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더 크지만, 그렇다고 FTA의 체결과 시행이 한국을 갑자기 최상의 선진국으로 밀어 올리거나 아니면 급격한 빈곤의 나락으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이는 제도결정론적 사고일 뿐이다. 4대강 문제도 객관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불되었고 또 지불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할만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엄청난 비용이 들겠지만 4대강 문제는 최소한 복구가 가능한 문제이다. 더더구나 서울시 무상급식 문제는, 그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규모와 대비하여 급식시행이 공공재로서의 교육에 가져다 줄 이득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왜 이것이 서울시장직을 걸만큼의 중대한 정치이슈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어려울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들을 둘러싼 정치담론은 이들에 대한 찬반문제를 옹

고 그림의 절대적인 규범의 문제로 환원시킨다.

우선, 한미 FTA를 둘러싸고 만들어진 담론을 먼저 살펴보자. 이 문제에 대한 찬성파나 반대파 공히 FTA문제에 대해 국가, 국민, 역사 등의 추상적인 용어를 가지고 담론을 구성함으로써 규범성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찬성론자들이 모인 한나라당은 한미 FTA를 “국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의 선진국 도약을 위한 미래의 성장동력”<sup>2)</sup>이라고 규정하고, 동시에 “21세기 성숙한 한미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굳건한 경제동맹”<sup>3)</sup>이라고 주장하면서 통상 문제를 국가안보 문제와도 연계시키는 담론을 만들어 냈다. 결국 한나라당은 한국의 성장과 안보라는, 한국인이라면 부정하기 힘든 가치와 FTA를 연계시킴으로써 통상 문제를 일종의 규범적인 문제로 환원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반대파를 비판하기보다는 비난했다. 즉 FTA 비준반대세력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회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 바른 길을 가야한다. 야당이...한미FTA의 처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훗날 역사의 준엄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훈계하고, “야당의 구국적인 결단”을 촉구했다.<sup>4)</sup> 이에 반대하는 야당은 도리에 맞게, “당리당락을 버리고 국익과 민생[을] 생각”<sup>5)</sup>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반대파도 이러한 식의 담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규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심지어 역사적 유추까지 동원했다. 예를 들어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2011년 10월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 위원회에서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향해 “경제주권 넘겨주는 외교부 관리들은 옷만 입은 이완용”이라고 비난했으며, 같은 당 천정배 의원도 한미 FTA를 제2의 을사늑약에까지 비유하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은 정부에 대해 “미국의 입맛대로 완전히 손해 보는 FTA 재협상을 해놓고 일말의 수치심도 미안함도 없는 이명박 정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sup>6)</sup>라는 경고를 던지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선출해준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ISD 조항을 폐기할 것

2) 2008년 5월 18일자 한나라당 조운선 대변인 브리핑.

3) 2009년 4월 22일자 한나라당 조운선 대변인 브리핑.

4) 2008년 5월 21일자 한나라당 소속의원 명의의 한미 FTA 비준 촉구 결의문.

5) 한나라당 당보 제92호 (2008년 5월).

6) 2011년 10월 16일자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다”<sup>7)</sup>라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는 한미 FTA는 결코 규범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식의 규범성은 4대강 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찬성파와 반대파가 만들어 낸 담론에서도 발견된다. 개발 찬성파인 한나라당은 4대강 개발이 “국토의 품격과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선진국 도약의 지렛대가 될 사업”<sup>8)</sup>이자, “선진국 진입의 문을 열 국가 미래 동력 사업”이면서,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역사적 인프라가 될 것”<sup>9)</sup>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처럼 좋은 일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행동을 반규범적인 “선거 정략에 눈멀어서 국가 미래 발목 잡는 일”<sup>10)</sup>이라고 정의했다.

민주당도 당연히 유사하게 반응했다. 한나라당이 2010년 12월 8일 국회에서의 4대강 관련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자, 민주당은 다음날인 12월 9일자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된 “MB 독재 심판을 위한 민주당 출정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죽었다. 의회민주주의는 철저히 파괴당했다.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 역사를 유린하는 야만적 독재세력임이 증명되었다. 민의는 내팽겨쳐지고, 야당은 폭행당하고, 무도한 MB 악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민주당은 무도한 정권의 독재를 뚫고 국민 속으로 뛰어 들 것이다.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독재를 심판하고 사망한 의회민주주의를 부활시켜낼 것이다. 민주당은 사즉생의 각오로 일치단결하여 국민과 함께 투쟁하고 평화, 민생, 민주를 지켜낼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라는 거창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개발의 완성이 다가오자 민주당은 정부는 조작된 통계수치로 업적 홍보할게 아니라 “이제라도 4대강 공사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국토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다”<sup>11)</sup>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심지어 무상급식마저도 정치담론을 통해 규범적인 차원의 문제로 환원되었다. 한나라당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민주당 등 야당세력에 대해 “민주당

7) 2011년 10월 28일자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8) 2009년 10월 7일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 논평.

9) 2009년 11월 9일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 논평.

10) 2010년 3월 19일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 논평.

11) 2011년 9월 28일 민주당 이규의 수석 부대변인 논평.

과 좌파 교육감들은 ‘부자에겐 공짜 밥을!’이라고 외치면서 ‘방학 중에 굶는 결식 아동은 나 몰라라’하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좌파 교육감, 좌파 지자체장들이 정략보다는 서민을 바라보는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하며, 한나라당은 취약계층 아이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sup>12)</sup>라는 경고를 발표했다. 또 2011년 8월 서울행정법원이 민주당 측이 제기했던 주민투표 청구수리 처분 집행금지 신청을 기각하자 이를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면서, 민주당의 신청은 ““서울시민들의 입’을 봉쇄하고 귀를 막으려는 반민주주의적 행동”이며 이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 경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sup>13)</sup> 그리고 주민투표를 앞두고는,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민주당의 반민주적인 투표 거부 작태에서 비롯된 것”이며 투표불참운동은 “비겁한 선택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sup>14)</sup> 무상급식 문제를 드디어 민주주의의 원리 문제와 연결시키고 한나라당 자신들을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싸우는 투사로 자리매김까지 했다.

민주당도 맞장구치듯이 무상급식 문제를 규범적 시각에서 접근했다. 무상급식의 시행 문제를 놓고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시장직을 주민투표에 걸자, 민주당은 이를 “서울 시민을 우롱하는 수준을 넘어선, 위협과 협박을 통한 ‘정치사기극’이고 서울 시민에 대한 ‘테러’”라는 맹비난을 퍼부었으며,<sup>15)</sup>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승리하자 이를 “사필귀정”이자 “시민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민주개혁세력의 승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sup>16)</sup> 사실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완전히 폐지하지는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니었기에, 이러한 식의 비난과 평가는 좀 지나치게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담론에서 발견되듯이, 한국의 정치인들은 사실상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히 관련된 정치적 문제들을 자꾸 규범적인 문제로 정의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규범성의 근원을 국가, 국민, 민주주의 등의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

12) 2010년 12월 22일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 논평.

13) 2011년 8월 16일 한나라당 대변인실 논평.

14) 2011년 8월 17일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 논평.

15) 2011년 8월 21일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 현안브리핑.

16) 2011년 10월 27일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 브리핑.

에서 추구한다. 그럼으로써 이들은 한국정치에서 절대선과 절대악이 맞부딪치는 장엄한 신화적 세계관을 생산하고 또 재생산한다. 이러한 신화적 세계에서 정치인들 스스로는 거룩한 역사적 사명을 띠, 마치 절대이성을 지상에서 구현하는 헤겔(Hegel)의 나폴레옹(Napoleon)과 같은 영웅으로 한국의 정치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남들은 근대를 넘어 탈근대를 얘기하는 21세기인 지금에 영웅신화적 세계관으로 점철된 한국정치는 분명 시대착오적이고 촌스럽다.

### Ⅲ. 영웅신화적 세계관의 맨얼굴

그렇다면 영웅신화적 세계의 진면목은 무엇인가? 앞서 살펴본 정치담론들이 보여주듯, 한국의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적 세계관 속의 영웅은 주로 국가, 국민,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지는 자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영웅들이 진정한 영웅이 되려면 이들이 모든 것을 내던져 지키고자하는 한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국민 또는 민족,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절대적인 규범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그러한 규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실체라고 할 수 있을까?

우선 국가라는 실체가 무엇인지 간략히 고찰해 보자. 물론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국가란 충분히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실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홉스(Hobbes)의 주장처럼 절대적인 사회계약의 산물일 수도 있고,<sup>17)</sup> 아니면 헤겔(Hegel)의 믿음처럼 개인의 단순한 욕구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이타성에 근거한 윤리적 실체로까지 개념화될 수도 있다.<sup>18)</sup> 국가란 그 실체가 무엇이든, 또 국가의 이름으로 얼마나 흉악한 범죄가 벌어지든,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규범적이고 윤리적이며, 심지어 신성한 것으로까지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경험적 수준에서의 연구는 국가에 이 같은 규범성이나 신성성을 부여하기를 거부한다. 심지어 국가는 일종의 마피아와 같은 존재라고 이해될 수도

17) Thomas Hobbes, *Leviathan* (Indianapolis, IN: Hackett, 1994).

18) Georg W.F. Hegel, *Hegel's Philosophy of Right*, translated by T.M. Knox,(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있다. 틸리(Tilly)가 논증했듯이,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대내외적 불안을 주민들에게 조성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그 불안들로부터 보호하면서 보호비를 갈취하는 조직범죄 집단과 상당히 유사한 기능을 국가가 수행한다는 것이다.<sup>19)</sup> 그렇다면, 특히 국가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많은 범죄들을 볼 때, 국가의 존재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규범적인 또는 윤리적인 시각에서 정당화할 수는 없다. 국가를 신성시할 수는 더더구나 없다.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윤리적 실체도 아니고 신성시되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시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 방해만 될 뿐이다.

또 정치인들이 그토록 애용하는 국민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듣는 국민통합, 국민 분열, 국민화합 등의 용어들이 암시하는 것처럼 정치인들은 국민이라는 용어를 하나의 유기적 통합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사용한다. 이런 유기체의 어느 한 부분이 잘려나가거나 작동을 멈출 때 생물학적 생존이 위협받듯이, 국민이란 따라서 결코 분열되어서는 안 되는 항상 통합되고 화합되어야 할 집단으로 이해된다. 무엇보다도 국민총화가 가장 이상적인 규범이 되는 것이고, 이견이나 반대는 국민이라는 집단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에 빠뜨리는 반윤리적인 행위로까지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이란 그런 유기체적 통합체일 수가 없다. 오직 전체주의나 파시즘 하에서만 그런 유기적 통합이 인위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생겨날 뿐이다. 대다수의 한국 국민이 한국인인 것은 순전한 우연의 산물이다. 단지 이 땅에서 한국 국민인 부모님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대다수는 한국 국민 또는 한민족의 일원이 된 것이지, 결코 민족중흥이라는 거창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은 아니다. 더더구나 하나의 유기적 통합체로서 “국민” 또는 “민족”이라는 개념은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한 집단의 사람들을 다른 집단의 사람들과 뚜렷이 구분해주는 구체적인 기준을 반드시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앤더슨(Anderson)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는 단지 “상상된 공동체”<sup>20)</sup>일 뿐이다. 유기

19) Charles Tilly, “War Making and State Making as Organized Crime,” in Peter Evans, Dietrich Rueschmeyer, and Theda Skocpol, 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169-191.



체적 국민관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우리를 파시즘으로 유혹하며, 더더구나 인종주의마저 조장할 수 있다.

분명 국가나 국민이라는 개념에 대비해서 볼 때 민주주의는 규범적 성격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갖는다. 특히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는 3자에게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싸워서 쟁취한 것이기에 더 그렇다. 그러나 그것이 규범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의 요구한다. 한국에서의 문제는 1987년 체제의 미완성적 성격 때문이겠지만, 제도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합의가 좌파와 우파 또는 보수와 진보 간에 부재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자체가 하나의 규범이라는 데는 정파를 초월한 동의가 있지만, 그 실질적 내용에 대한 공통의 이해는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그동안 없었다. 정치인들은 민주주의를 단지 하나의 정치적 수사로 이용해왔을 뿐이었다.

그렇다 해도 한국은 민주주의의 국가이다. 적어도 제도적 수준에서의 민주주의는,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발표하는 “세계의 자유” 보고서나 국경 없는 기자회견(RSF)이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보여주듯이,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꾸준하게 진전되었다. 비록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러한 지수들이 후퇴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완전히 과거의 권위주의체제로 역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선거라는 새로운 정치적 선택을 위한 공간은 주기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있는 한 과거로의 회귀는 있을 수 없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또는 지켜내기 위한 영웅의 출현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필요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결국 정치인들이 담론을 통해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영웅신화적 세계관의 맨 얼굴은 공허할 뿐이다. 국가와 민족을 구원하는 또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영웅이고 싶은 정치인들의 허세를 반영할 뿐이다. 그래도 정치인들은 거의 관습적으

20)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

로 영웅신화적 세계관으로 현실정치를 재구성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영웅으로 재탄생시키고자 시도한다. 지난 대선의 결과에 (샐러리맨) 영웅신화가 미친 무시할 수 없는 영향으로 인해, 특히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들은 더욱더 영웅적 이미지를 스스로에게 투사하고자 하기도 한다. 하지만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웅담을 쓰려는 시도가 항상 성공적이지만은 않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여준 것처럼 영웅담은 종종 속절없는 희비극으로 종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의 문제를 “원칙과 가치를 선택하는 문제”로 파악했다. 자신이 말하는 원칙과 가치에 어긋나는 무상급식이란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들 “망국적 포퓰리즘” - 실제로 그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불명확하다 - 이며, 그렇기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것은 “죄”를 범하는 행위라는 것이었다. 결국 오세훈의 세계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 제공은 규범적으로 잘못된 행동이자 우리를 망치는 사악한 행위로 해석되고, 자신은 올바른 원칙과 가치를 위해 시장직을 내던지는 숭고한 자기희생마저 기꺼이 감수하는 시대적 영웅으로 자리매김 되는 것이다.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그가 동원한 담론들은 진정으로 시대착오적이면서 촌스럽기도 했지만, 오세훈의 세계를 서울시민들이 거부하면서 그가 자신을 시대적 영웅으로 재탄생 시키고자 했던 시도는 희비극, 즉 오세훈과 그 지지자들에게는 비극으로 또 그 반대자들에게는 희극으로 종결되고 말았다.

#### IV. 정치의 일상성을 회복하자

한국의 정치인들이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끊임없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져 있어야 한다. 평화와 안정의 시기는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웅이 되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항상 자신의 정치담론을 통해 위기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 그렇기에 이들은 심지어 객관적으로 나쁘지 않은 경제도 경제파탄 또는 민생파탄이라고 정의한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유지를 위한 남북관계의 진전도 그것이 한국이라는 국가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협박한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반대는 망국적이고 패륜적인 나라 망치기로서 역

사와 민족 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저주한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목소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거나 정책결정에서 소외될 때, 이들은 민주주의의 원칙이 위협받고 있다고 과장한다. 이렇듯 위기가 존재해야 자신이 국가와 국민 또는 민주주의를 구원하는 영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화 속이 영웅들이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인물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때로는 운명에 의해, 혹은 신의 계시를 받은 영웅들은 역시 운명적으로 결정된 반영웅들과의 투쟁을 통해 승리하거나 또는 장엄하게 패배하거나 할 뿐이다. 거기서 대화나 타협의 여지는 없다. 당연히 한국의 정치에서도 이성적인 대화나 토론,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의 제시, 촌철살인의 유머 등은 찾기 어렵다. 합리적으로 정치에 접근하는 정치인들의 정치수명도 그리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렇기에 시대착오적인 촌스러움, 즉 특정 정치인에 대한 영웅시 내지 악마화, 막말, 몸싸움, 이념보다는 인물 중심의 이합집산, 가스통 집회 등이 21세기의 선진 민주국가인 한국의 정치를 특징짓게 되는 것이다.

신화적 세계관으로 인한 촌스러움은 한국정치에 실질질인 폐해도 끼칠 수 있다.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폐해는, 정치인들이 자신과 반대자를 규범적인 시각으로 재단하기에, 양자 간의 합리적 토론이나 건설적인 타협이 극도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정책결정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게 만들고 전체적으로 정치의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는 대중들이 정치에 대한 회의감이나 무관심을 갖게 되기 쉽다는 것이다. FTA, 4대강, 무상급식 등의 문제에 대한 찬반논쟁은 이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 것인가라는 현실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영웅신화적 담론은 이들 문제를 정의와 불의 간의 대결이라는 일상적 현실과 멀리 떨어진 추상적 문제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결국 일상의 삶에 허덕이는 많은 대중들에게는 정치에 대한 회의감이나 무관심만 남기 쉽다. 이 맥락에서 폐해를 하나 더 들여보자면, 정치에 대한 회의감이나 무관심은 대중들의 정치참여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화적 세계관을 공유하는 대중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영웅의 투쟁에 감명 받고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할 수도 있겠지만, 이성적인 대중들은 오히려 정치에 대한 회의감이나 무관심 때문에 정치참여 자체를

외면해버릴 가능성도 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중들의 정치외면은 그 자체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결국 영웅신화적 세계관에서 기인하는 시대착오적인 존스러움의 극복은 정치를 신화의 세계로부터 현실세계로 가져옴으로써 정치의 일상성을 회복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이 실제로 민주주의 국가라면 더더구나 그 일상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사실 정치란 일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이스턴(Easton)의 가장 유명한 정의처럼 정치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sup>21)</sup>이라면, 배분을 위한 권위가 신화나 전통에 근거하든, 영웅의 카리스마에 뒷받침되든, 아니면 합리성과 합법을 필요로 하든, 정치란 궁극적으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의 일상적인 삶과 관련된다.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실존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힘든,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면 정치적 또는 사회적 동물일 수밖에 없다.<sup>22)</sup>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여 살다보면 각자의 일상적 삶에 필요한 한정된 유무형의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다시 말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가질 것인가”<sup>23)</sup>의 문제가 대두하기 마련이다. 정치의 주요 기능은 바로 이들 자원을 모두에게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수용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분배해 주는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에서는 가치의 배분에 대한 대중들의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기에, 민주주의에서의 정치란 더더구나 일상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정치가 정의와 불의간의 투쟁으로 환원되기 쉬운 영웅신화적 세계관은 민주주의와 양립하지 않는다.

한국의 정치는 이제 신화적 세계에서 벗어나 현실의 세계로 돌아와야 한다. 충분히 그럴 때가 되었다. 한미 FTA, 4대강 개발, 무상급식 등의 첨예한 정치적 이슈들은 이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21) 이 정의에 대해서는 David Easton,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와 David Easton, *The Political System: An Inquiry into the State of Political Sci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등 참조.

22) 인간은 사회적 또는 정치적 동물이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Aristotle, *The Politics*, translated by T.A. Sinclair and revised and re-presented by Trevor J. Saunders (London: Penguin Books, 1981) 참조.

23) 이것은 라스웰의 정치에 대한 정의이다. 이 정의에 대해서는 Harold D. Lasswell, *Politics: Who Gets What, When and How* (New York: P. Smith, 1950)을 참조.

관점에서 논의되고 이에 대한 정치적 찬반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 국가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또는 민주주의 원칙을 위해서라는 식의 담론이 끼어들 여지는 크지 않다. 보다 구체적인 맥락에서 정치담론을 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영웅신화적 세계관의 공허한 맨얼굴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관련된 정치의 주체가 신화적 영웅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가진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 - 시민운동가이든, 컴퓨터 전문가이든, 아니면 가정주부이든 - 입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자신의 구체적인 삶을 기준으로 우리들의 정치적 선택이 만들어진다면 신화적 세계관 속의 영웅이 되고자하는 정치인들은 현실정치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다.